

“지방주도 성장 모델, 광주·전남 행정통합 확실히 될 것”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정부 자원·역량 재배치 ‘성장지도’ 다시 그려내
재정 지원 35% 배정…산업경제 발전 토대 조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정 등 기업유치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8·19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대전환·대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5대 국정운영 기조’ 중 하나로 ‘지방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주도 성장 외에도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이 5대 국정 운영의 기조로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 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라 단지 지

방을 위해서 ‘떠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다”며 “정부가 지난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며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진 중인 광역행정통합과 관련해 국정 운영 의지와 정책 방향을 세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제도의 골격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분권과 자치인데 핵심은 재정이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한다. 지금 지방 재원 배분이 72·28 인데 지방 자체 재원 규모가 28%가 아니라 40%는 돼야 한다. 쉽지는 않다. 중앙 정부가 (예산을) 지방에 줘서 집행을 하는데 75% 가량 돼 이를 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하튼 통합을 해야 소위 5극 3특 체제에 남부는 해양 수도로 벨트를 만들고 중부는 행정 수도로 벨트를 만들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일대는 문화 수도, 경제 수도로 조성하는데 규모가 다 나눠져 있어

되질 않는데, 최근 광역통합 작업이 스타트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재정이나 지원을 해줄 테니까 이번 기회에 좀 해보라고 하니까 전남광주가 갑자기 ‘우리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재정을 대폭 늘려서 지원해주겠다고 했고, 4년 동안 20조원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율리 “충남 대전은 약간 반대 기류가 생겨나는데 전남광주는 확실히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을 하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핵심은 재정 지원 대폭 확대와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며 “다시 사람이 몰려오게 하려면 정주 여건, 문화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기업 유치도 해야 된다. 기업 유치하려면 세제·고용 지원, 연구기관도 만들어야 하고, 학교 더 늘려야 되고 초중고도 개선해야 하고 할 게 많다”고 했다.

또 “권한 이양·산업 배치에 있어서 우선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게 공공기관 이전인데, (이전할 기관이) 300~400개 있다고 하니 2차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다. 이걸 따로 흘어놓으면 효과가 없다. 이걸 물어서 하되 광역 통합을 하는 데는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자. 이러면 유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 도심전역 ‘자율주행 실증무대’로 바뀐다

국토부, 첫 도시단위 시범운행…자율차 200대로 기술 검증

광주 전역이 자율주행차의 실험무대로 바뀐다. 출근길 도심 간선도로부터 주택가 골목길, 지하철도와 교차로까지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 위를 자율주행차가 달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21일 발표하고 광주를 단일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대규모 실도로 실증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한다.

특정 노선이나 제한 구역이 아닌, 도

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국토부는 오는 4월 광주 전역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뒤, 교통량이 적은 신시가지와 외곽부터 실증을 시작해 구도심과 혼잡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증에 참여할 자율주행 기업은 3곳 안팎으로 선정된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자율주행 전용 차량 200대를 기술 수준에 따라 차등 배분해 실제 시민 생활 도로에서 주·야간 운행을 허용한다.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행을 시작하고, 평가를 거쳐 원격제어를 거쳐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실증 결과는 로보택



시 등 상용 서비스 겸용으로 바로 연결된다. 이번 실증의 핵심은 사실상 ‘무(無) 규제’에 기반한 환경 조성이다. 광주 전역은 자율주행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샌드박스로 운영된다. ▶2면서 계속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종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은 한 전 종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관련기사 9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 더 높은 중형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 광남일보 신춘문예 오늘 시상식 본사 1층 대강당 오후 2시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